중국은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을 중단하라

G7+7 연례 청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유럽 연합
+ 아르헨티나, 호주,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한국, 대만

강제 장기적출이란 타인에게 이식하기 위해 장기를 적출하는 과정에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국가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25년 동안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21세기의 가장 심각하고 끔찍한 반인도적 범죄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제프리 나이스경**(Sir Geoffrey Nice KC)**이 의장을 맡은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강제 장기적출이 중국 전역에서 수년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됐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파룬궁 수련생이 주요 피해자 집단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파룬궁의 진선인(眞善忍) 수련을 탄압하고 이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강제 장기적출은 파룬궁에 대한 은밀한 집단 학살이라 불립니다. 국제 사회의 불충분한 조치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같은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비윤리적인 불법 의료 행위는 전 세계 의료의 윤리적 기준을 위협합니다. 이 야만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직접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G7+7 국가의 정부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관행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다음을 포함한 정부 간 행동 계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중국 내에서 장기 이식을 받거나, 의료 행위 및 연구 또는 교육을 통해 강제 장기적출을 방조함으로써 강제 장기적출에 연루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알리고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라.

2)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이 중단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독립적이고 예고 없는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때까지 중국과의 이식 관련 진료, 연구 또는 교육 교류를 중단하라.

3)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연례 의회 청문회를 시작하고 증인 및 전문가 증언이 포함된 연례 보고서를 제공하라.

4) 중국에서 파룬궁, 위구르족 등을 대상으로 자행된 집단학살 협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라.